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3(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담당자	• 과장 강태석, 사무관 전인재, 주무관 하철호 • ☎ (044) 201-3383, 338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'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가이드라인...' 정비사업 정부 표준정관 유명무실 관련

□ 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표준정관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'03년 제정되면서, 법 제정 초기에 조합에서 원활하게 정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.

○ 정부는 그 동안 표준정관이 아닌 직접 법령 개정*을 통해 정비사업의 비리·분쟁을 차단해 왔으며, 그 결과 표준정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.

* ('12년) 중요사항에 대한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및 의결정족수 가중, 정보공개 범위 확대, ('16년) 조합임원의 임기 상한, 검인동의서 도입, ('17년) 용역 계약시 경쟁입찰 의무화 등

○ 표준정관의 효용성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후 표준정관의 내용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머니투데이), 10.23 >

◆ ‘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가이드라인...’ 정부 표준정관 유명무실

- 15년전 내용 그대로... 분쟁 발생·비리 싹틀 가능성만 ↑
- 정관 참고했다가 지자체서 되레 설립인가 반려당하기도
- 국토부 “내년 2월 법 전면개정 맞춰 개선여부 검토할 것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(☎ 044-201-33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